

經濟民主化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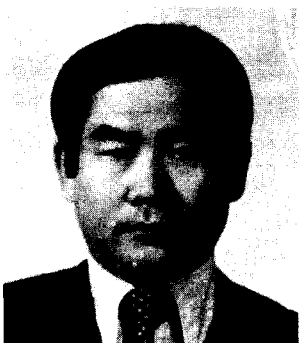
1. 경제 민주화의 길

원래 민주주의란 主權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장이며, 이에 따라 經濟的 民主主義란 경제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위주로 운영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중이나 서민들에게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

이상과 같은 본뜻을 음미해 보면서 우선 먼저 경제민주화의 실제 모양이 어떤 것이고 그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

필자는 지난 2월에 유럽지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영국 등을 순방한 적이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느낀 국민생활상의 특징은 한결같이 자유스러운 福祉國家로서 社會 전체가 民主化가 되어 있구나 하는 직감이었다. 실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화란에 이르는 모든 유럽지역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그대로 사회보장이 철저히 확립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개인이 기본권, 예컨대 언론, 집회, 결사,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완전하게 행사하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으려니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民主主義를 共存, 共生의 논리위에서 계급의 위화감이나 개인의 소외감 없이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련혁명이 물고은 스탈린식 불세비키 공산주의조차 조금치도 발붙일 틈이 없으려니와 히틀러식 팻지슴마져 다시는 얼씬거릴 수 없는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성을 짓밟거나 自由를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구실로도 獨裁할 수 없는 사회로서, 인간존중의 휴머니즘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체제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 화 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 목 차 ■

1. 경제 민주화의 길
2. 우리 기업의 세계적 위상
3. 기업윤리와 기업집단
4. 복지경제의 건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선 어린애를 낳으면 出産費가 한집생활비의 두배정도로 두둑히 나온다. 그뒤, 양육비가 매달 충분하게 지급된다. 그래서 西獨에서는 아이 셋만 기르면 부자 중산층으로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서독의 공업지대는 옛날에 세계전쟁을 일으킨 「크롭」재벌이 철강생산의 중심지로 삼았던 北독일 즉 「알사스」, 「로렌」, 「루루」공업지대로부터 오늘날은 하이테크산업을 위주로 「케른」이남의 南독일로 이동되었다. 이제는 세계 제일의 공업국이면서 생산은 高密度 공업제품과 尖端産業위주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최고의 국민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勞賃수준도 높고 노동의 품질이나 노동생산성도 높으며, 근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勞使協助는 원만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직장을 잃는 경우 그것이 마찰적 失業인 경우(독일은 구조적 실업은 없는 셈임)에도 失業保險이 두둑히 나온다. 물론 나이들어 정년퇴직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큼 養老保險이 지급된다. 한 마디로 살아가는데 전혀 걱정없이 일생을 마친다.

이 때문에 때로는 노동의욕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도 생기고 허드레 일들은 백인들이 별로 하려고 들지 않음으로 아프리카 흑인 남녀 노동자들이 대신하는 모습은 유럽 각국에서 흔하게 눈에 뜨인다.

사람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住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유럽지역에서는 일생동안 적어도 50년간 값싸게 얻어사는 賃貸住宅이 제공되고 있어 따로 내집마련의 꿈이나 집없는 설움을 모르는 곳이다.

사람이 人間답게 살기 위해서는 衣食住의 해결이 生存의 기본조건으로서 중요하지만, 敎育은 生活의 조건 더 나아가서 각계각층의 人材양성을 위해서 더더욱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받는 일은 최선의 의무이고 권리이다. 특히 합리적인 유럽의 大學교육은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능력없는 학생은 일찌기 의무교육이나 實業교육만 받고 취직해서 돈벌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느라고 大學에 불래 가라고 해도 거부하는 사회로서 전혀 無料이다. 國公立, 또는 교회에서 公益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있을 뿐이며 우리나라 미국, 일본처럼 민간 私立大學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귀중한 최고등교육을 사사로이 맡길 수 있느냐고 의심할 정도이다.

한마디로 유럽의 국민생활은 공익화, 사회화, 복지화를 지향하면서 어떠한 독재도 배격하고 어떤 사리사욕도 배제하는바 이를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복지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제기는 일찍부터 있어 왔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新興工業國(NICS)의 선두주자로 부각되어 경제적 自立을 구가하고 있는 차제임으로 우리 사회도 유럽과 같은 사회자유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독립된지도 43년이 지났고 건국초의 헌법에 이미 정치적 자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민주주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경제력이 미약한 후진국의 처지로서 술한 고난을 겪어 왔으나 이제 국제수지 黑字가 나온 지도 3년이나 되어 금년에는 11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高度成長에 대한 반성으로서도 경제적 민주화의 길은 필수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

이웃 日本도 80년대 이후에야 고도성장의 반성으로서 사회보장이나 복지, 생활개선 정책이 진행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한

국이 아직 국민건강 의료보험조차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심한 勞使분규를 겪고있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일본에 뒤따라서 점진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은 충분히 성숙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리 企業의 세계적 位相

최근년 동안에 우리 나라 企業은 양적으로 대단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87년말 매출액을 기준삼은 세계 500大企業을 미국의 「포천」 경제잡지가 발표한 것에서 찾아보면 한국 기업이 11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다.

이미 우리 나라가 국제수지 흑자를 처음 내기 시작한 것이 '85년도부터 벌써 3년째 되어 금년에는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적어도 총수출액이 473억 달러나 되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달하는 新興工業大國으로 발돋움한 저변에는 이와같이 한국기업의 규모가 급속히 팽창될 저력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미 '85년도에 한국기업은 「포천」 경제지에 10개사, 즉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선경, 한진, 쌍용, 한국화약, 효성, 포철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나누어 끼고, 두산그룹이 추가되어 11개사가 미국을 제외한 세계 500大企業속에 당당히 들어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열도 훨씬 높아져서 100大企業속에 삼성(20위), 럭키금성(32위), 대우(35위), 선경(90위)로 4개사나 들어 있다.

이만큼 돋보일 정도로 한국기업은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경제력이 외형상으로 국제화 되면서 해외투자도 힘차게 뻗어나

아가고 있다. 금년도 재무부가 밝힌 자료를 보아도 20대 재벌기업들이 해외투자한 총자산은 4조 8천 4백억원에 달하고 해외現地法人體만도 182개사나 진출하고 있다고 밝혀준다. 예로서 대우(24개사), 삼성(25개사), 현대(25개사), 럭키금성(19개사), 선경(13개사) 등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만큼 한국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간판기업들이 국제적인 위상과 국제투자진출을 날로 더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모로 보나 전체 한국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해서 국제적 수준에 올라 있다는 뜻이 되고, 이는 곧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대단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로서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활동은 질적인 면 또는 재무구조상에 나타난 자본력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취약한 속사정을 전혀 감출 길이 없는것 같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이번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신문에 「속빈 강정」이라고 평해 놓은 것처럼 순자산규모는 취약하여 「자기돈」은 빈약하고 소위 「문어발식」 상호투자라고 해서 그룹내 자기들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서로 튀밥튀기듯이 출자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주식값으로 평가되는 만큼 또는 국제적으로 랭킹에 오른만큼 그렇게 실속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로서 국내재벌 15개사의 공칭 총자산 규모가 1조원~9조 6천억원 사이에 있고, 그 뒤를 이은 16번째 회사 이후 40번째 회사까지는 총자산이 1조원 미만 4천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순자산이 1조원 넘는 재벌들 3개사의 경우 그 순자산(자기돈)은 20%를 밑도는 허약한 처지이다. 오히려 놀랄만한 일은 국내에서 덩치가 가장 큰 현대의 경우 총자산은 순자산의 7.5배에 달하고 몇몇 재벌은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깡그리 자본잠식

된 상태에서 버젓이 은행돈, 남의돈 끌어다 기업놀이하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감독원이 내놓은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기업이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빚을 35조 2천 2백억이나 쓰고 있고, 총은행 여신의 33.7%를 점하고 있으며, 5대그룹만도 20조 6천억원의 은행빚을 쓰고 있어 총여신의 19.7%나 된다고 한다. 또한 작년 4월 1일 현재 32개 재벌그룹의 계열회사들 사이에 밀돈도 없이 주고받은 상호출자액은 무려 3조 4천 7백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30대 재벌 중에 4개 그룹은 계열사가 50개나 되고 6개 그룹은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튀밥튀기기식의 헛자산을 늘려 놓은 셈이다.

이로서 볼때 대재벌그룹만이 세계적 위상을 가졌다고 해서 한국을 총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자기돈은 적게 쓰고 국민돈만 몽땅 써가면서 그것도 문어발식 상호출자로 경영성적을 얻는다고 우리 경제가 병들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평가를 명실상부하게 받는 자세는 바람직한 일이고, 국내 경영에서 과욕만 부릴 것이 아니라 실속있는 기업집단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국민경제에의 기여도는 필수과제라 하겠다.

3. 기업倫理와 기업집단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래 모든 軍閥들이 맥아더 미군정사령부에 의해서 해체된 뒤로 그뒤 새로이 생겨난 大企業 그룹들은 「企業集團」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나 결코 한국과 같은 「財閥」칭호를 듣지않고 있는 점이 이웃나라간에 매우 눈여겨 주목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이라면 곧바로 재벌을 연상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보는 이미지

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벌들의 행동도 가끔 물의를 야기시킬만큼 경제 민주화에는 동떨어진 일이 허다하다. 이는 아직도 한국의 企業倫理를 정착시키지 못한데 큰 요인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기업집단이라고 부르는 대기업그룹이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경영에 의해서 기업풍토나 경영철학을 영위함으로 우선 기업자체가 건전하다는 뜻에서 국민들의 거부감도 전혀 없을뿐더러 아무런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바 없다. 그러나 韓國에서 대기업은 아직도 재벌이라 부르고 국민의 눈초리는 불신감을 떨치지 못하며 정부역시 재벌과 유착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때때로 공정거래법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지탄을 재벌쪽에 전가시킨다. 결국 재벌노릇 하면서도 불안한 경영상태를 면치 못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불안스럽기 짝이 없는 상태가 많다.

재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의 「기업집단」과 한국의 「재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점들을 분석해서 한국에 대기업의 새로운 면모 및 새로운 기업풍토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벌이란 뜻을 풀이해 보면(發展途上國の財閥, 아시아經濟研究所, 1983) 「재벌이란 가족 또는 동족에 의해서 출자된 母會社(본사)가 중심이 되어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산하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종류의 산업을 경영시키는 기업집단으로서 대규모의 子會社는 각각의 산업분야에서 과점적 지위를 점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재벌은 첫째 가족적, 족벌지배, 둘째 다각화된 여러 기업의 피라밋형 체제구성, 셋째, 산하대규모 자회사의 과점적 지위 등이 된다.

일본의 기업집단과 한국의 재벌과의 차이를 들면 첫째, 재벌의 중심은 商業자본이지만 기

업집단은 金融자본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다. 물론 일본만이 독특하게 발전한 종합상사가 상업자본을 운영하면서 무역부문의 유통을 담당하면서 여러 기업간의 신용을 연결시키지만 일본의 9개 종합상사의 50% 주식은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으므로 자금공급이 원활하고 건실하다

둘째, 재벌과는 달리 기업집단은 개개의 산하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면에서 기업의 계열사가 분권화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재벌은 철저하게 모회사(본사)가 모든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을 지배하고 한국의 경우 본사와 자회사, 손자회사간에 상호투자로서 가공의 자산까지 몇배로 창출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폐쇄적인 재벌내의 거래에 비해서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독자적 경영과 더불어 전혀다른 기업집단과 거래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개념도 옛날에는 100명 이상의 종업원이 대기업이었으나, 지금은 1,000명 이상으로 바뀌어져 있을만큼 기업들이 대형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중소기업도 수백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헤아릴만큼 자산규모도 크다.

따라서 기업윤리를 들추면서 대기업 재벌들만에 국한해서 한국적 취약성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재벌기업 30개가 '85년도 총수출액의 41.3% 그리고 제조업 총매출액의 40.2%, 또한 고용비중은 17.6%인 점을 감안해볼 때 한국의 재벌형태는 일본의 기업집단처럼 하루빨리 체질개선과 독자적 경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에 기여해야될 과제는 시급하다.

4. 복지경제의 건설

그간의 우리 나라 고도경제성장은 오늘에 이르러 신흥공업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데 아

무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었으나 경제 및 사회의 구석구석에 쌓인 주름살은 이제 고도성장의 깊은 반성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문제제기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만 커졌다고 해도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또는 빈부격차 등과 산업간의 불균형에 이르는 소득배분의 문제는 말할나위도 없으려니와 무엇보다도 社會的 公正 및 生活의 安定과 개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福祉 즉 Welfare를 넘어서 生活改良 즉 Well-being을 이룩하는 과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소득분배가 고루 정책적으로 상승되어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져야 하는 일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社會指標나 국민복지지표(NNW)까지 만들어서 종래의 고도성장경제에서 미처 평가할 수 없었던 부문들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가전제품등 내구소비재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는가를 위시로 여가의 선용, 주부들의 가사노동감소라든지 그리고 주택, 문화, 스포츠 및 교육등 주거환경의 개선과 의료보험, 양로공해, 교통사고, 노동재해 및 有害상품에 이르기까지 이를 생활개선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같은 복지경제의 구축은 현실적인 당면과제이며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社會的 公正은 고도성장의 찌꺼기 또는 정부의 특혜정책의 부산물로서 국민전체에 전가되고 있는 부담부터 거두어 가는 것이 우선 복지경제에 앞서 더욱 절실한 과제일것 같다.

예로서 첫째, 국제수지흑자가 나는데도 외채는 갚지않고 투기자금이나 지하경제로 활용되어서는 안될것이란 점과 둘째 부실기업정리

한답시고 소수기업에 특혜나 주고 그 엄청난 부채를 국민전체에 전가시키는 일 등은 이제 복지경제 이전에 사회적 공정의 문제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부터 출발해야 할 일이다. 그런연후에 복지경제나 생활개량경제를 지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사회건설이 될 것인가.

지난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외채는 장기 3백 1억달러, 단기 87억달러등 모두 3백88억달러이고 여기에 현지금융 53억달러를 합치면 총외채는 아직도 4백41억달러나 된다. 대외자산 1백21억달러가 있어서 이를 제외한 순외채를 나머지로서 계상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금년에도 국제수지 흑자가 1백1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85년 이래 흑자기조의 좋은 경기 상태에서 이들 외채를 충분히 조기상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은 남겨두고 흑자수입을 그대로 원화로 바꾸어 부동산투기, 증권투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열을 올리게 만드는가이다. 이 때문에 해외부문 통화팽창은 가뜩이나 원화의환율이 높아져 해외투기자금의 유입이 급증해서 여기에 가명제까지 겹쳐 무서운 인플레이를 유발시킬 위기에 놓여 있는데다가 국민의 실질소득을 빼앗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또한 외채부담이 국민부담으로 남아 원리금 상환만도 55억달러 원화로 4조억원이나 지출된다는 사실은 복지경제 이전에 국민수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실기업 정리만해도 그렇다. 최근 재무부가 국회에서 밝힌 자료(7월 21일)에 의하면 전체 70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 총금융기관 대출액이 9조 7천 8백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부실기업이 왜 생겼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첫째, 부실기업정리가 너무나 편파적인 특혜일변도로 처리되었다는 점과 둘째, 은행의 부실채권형태로 남아있는 9조억원이 다같이 국민경제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부실기업정리 과정은 자산을 훨씬 초과한 부채에 대해서 利子를 면제해 주고 원금을 탕감하면서 일부 갚는 방법도 어떤 것은 15년거치 3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종자돈(씨드 머니)까지 대주는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새기업을 인수하고 30년 후에도 갚도록 하고 이자는 없고 보태쓰라고 몽땅 종자돈까지 없어 주는 부실기업 정리방식이 언제나 민주화되어 경제운영 방식으로 바뀔 것인가.

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57개 부실기업의 자산초과 부채액이 3조 6천억원, 회수불능 대출채권 2조 6천억원 기타 해운산업 합리화 및 해외건설합리화에 지원된 부실채권을 합해서 현재 은행채권이 약 9조억원으로 남아있는데 이들 거액부실채권은 국민경제부담으로 처져 있으니 이 역시 국민경제운영으로부터 부실채권액에 이르기까지 비민주적 경제손실로 국민에게 떠맡겨진 셈이다.

따라서 복지경제의 건설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복지나 생활개량을 위해서 소득격차의 해소, 생활수준향상, 보험등 사회보장제도, 교육, 문화, 공해방지, 자연보전등 당면과제가 많으나 그이전에 무엇보다도 해외부채나 부실기업 정리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국민경제부담, 또는 정부와 기업이 유착된 비민주적 특혜, 관치금융 및 재정자원 등이 이땅에서 먼저 개선되고 사라져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경제와 기업의 발전과정은 일찌기 근대화과정 자체가 外勢 자본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를 통해서 종속적으로 존재양식을 지켜왔고 해방후 남북분단으로 민족공동체 경제가 그나마 왜곡되고 畸型的으로 된데다가 6·25 동안

으로 완전 파괴되고 破行的인 경제를 노정시켜 왔다.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경제를 작동시키면서 취약한 경제구조와 영세한 기업규모를 가지고 국제경쟁을 치뤄나간다는 일은 여간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 불균형 성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결과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80년대 중반이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면서 미국의 써비스무역, 하이테크산업이 한국으로 국제하청이 주어지고, 中共의 경제개발 모델로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中進國, 또는 新興工業國(NICS)의 경제위력과 대기업체제를 갖추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였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경제적 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는 국제화에 부응하면서 밀어닥치는 市場開放壓力에 대처하는 일방 국내적으로 福祉사회건설 목표를 수행해서 구김살없는 국민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과제이다.

企業은 국민경제의 主力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키워가면서 각기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다만 기업의 체질은 새로운 차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종래의 정부의존적 운동방식이나 재벌의 성격에 의

한 상업자본의 경영방식에서 산업자본적 또는 경영방식의 분권화 및 독자성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 企業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민주화의 추세에 맞추어 그 사명이 더욱 절대적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企業集團이 보여주는 社會의性格으로 전환해서 문어발식 상호투자나 부채의존의 용자, 외채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자체순자산을 충실히 하는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를 갖추어 국민경제부담을 안겨주지 않는 일부터 사회적 책임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勞使협조체제, 복지경제에의 참여의식이 전국민들에게 인식되어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국민의 신뢰와 국민노동력이 기업을 통해 공생, 공존하고 국제경쟁력을 뒤받침 해줄 수 있는 공동협력체제로 바뀌어지게 되어야 될 것이다. 이로서 소득분배가 같이 나누어 먹고 중신고용제로서 내 살림으로 생각케 되고 또한 기업이윤은 사회적으로 환원된다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재벌이란 용어조차 없어지고 한국기업이 국민의 신뢰받는 企業集團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정부주도하의 경제적 민주화나 복지사회 경제의 건설은 이 역시 민간주도하의 기업풍토 개선이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지는데 필수불가결한 지원정책으로 뒤 밀어져야 할 일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란 점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